

2014. 11. 17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공정경제팀 권혁부 팀장 [02-731-2430] 구윤모 연구원 [02-731-2432]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소기업연구원 KDI 공동세미나 개최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책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해야 」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소기업연구원, KDI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14일(금) 오전 9시 반에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은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소기업정책은 주요 핵심정책과제로 설정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중소기업정책은 중기청을 중심으로 수요자별 다양한 특성에 맞는 정책 전달이 가능한 통합적인 정책분류 체계를 구축(코드화 작업)하고 지원정책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중 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책분류체계 개선(코드화 작업)이 진행중이며 분류체계의 혁신과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및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제1부 : 주제 발표

제1세션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체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정책본부장)

○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종합하면 크게 네 가지 형태임

1) 정부부처별 유사 지원제도 운영

- 중복성이 심함
- 중소기업은 신청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불만 제기
- 지원제도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기획되어 집행되고 있음

2) 복잡다기성, red tape

- 지원제도와 절차 복잡, 서류요구 및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이 심함
-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신청가능한지 파악하기 어려워 중소기업 입장

에서 혼란 야기

3) 기업 선정 및 중복 등의 문제

- 정책대상 선정 시 부적절한 기업 선택
- 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중복 문제
- 장기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속칭 좀비기업이란 부작용 발생

4)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 중소기업 지원 효과에 대한 체계적 성과평거나 지원기관 평가 미흡
- 각 기관마다 발표하는 지원성과에 대한 신뢰성 미흡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 정책전달체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향후 과제

1) 통합관리시스템의 내실화 추진

- 데이터 확보 및 연계체계 강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시스템 마련, 기관 평가 체계 마련

2)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혁신 추진

- 장기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맞춤형정보를 개별 중소기업에 제공, 사실에 입각한 정책개발

제2세션 “정책전달체계의 혁신(KDI 장우현 부연구위원)

- 정책의 공급자(정책당국)는 정책분류체계를 혁신하여 정책 재구조 필요
-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책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해야 함
- 정책분류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상정책에 과학적인 정책분류체계(정책등록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예산지원과 연계가 필요
- 정책공급자 입장에서는 과학적 분류를 통해 유사한 수단/목적은 공유하는 사업들을 파악하고 통폐합하여 규모의 경제 추구
 - * 유사한 대상을 조준하는 사업들을 파악하고 정책패키지화하여 소비자 선택에 기여
-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최소의 탐색비용으로 쉽게 필요한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차림표 및 정책 안내시스템의 구축 필요
- 정책 효율성과 전달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인 상시심층평가체계와 정책 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제2부: 전문가 패널 토론

< 권순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

- 기존의 정보제공 시스템과 차별화된 중소기업 전달체계의 플랫폼 역할 기대
- 분산되어 있는 Data의 효율적 생성 및 갱신 여부가 시스템의 지속성과 활용도 제고의 성패요인임
- 정책성과 평가 측면에서는 각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사업별 목적 달성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함
- 수요자 측면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며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
- 쏠림 또는 중복지원과 단계별 또는 연계지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함

<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

- 통합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
- 시스템 구축과 전달체계 혁신은 중소기업 관련부처가 모두 함께 노력하는 정부 3.0의 성과물로 볼 수 있음
- 시스템 구축과 전달체계 혁신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미시적 노력이며, 정책성과에 대한 논의는 중소기업 정책의 거시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 >

-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원부자재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홍보 마케팅 지원 필요
 - 특정 시간대와 상관없이 벤처 또는 매출액 100~500억 이하 중소기업에게 TV 광고기회 부여(현재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서 자금력으로 광고 선점)
- 창조적 R&D를 위해서는 계량적 수치위주인 정부 R&D지원과제의 심사기준 변화 필요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 중소기업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1) 직접적이고 개별적 지원보다는 인프라, 네트워크 투자 및 연계 활용형 정책으로의 전환 추구
 - 2) 정책수요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수요 맞춤형 정책 수립체계 구축 필요

- 중소기업 정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 관점이 충실히 반영
-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춰 지원제도의 통합 및 단순화

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획기적 확충 필요

- 자금 이외에 정보제공, 학습, 컨설팅, 중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제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확충

4) 중소기업 정책전달체계의 개혁

- 정부와 공적 지원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대한 도우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 필요